



꿈수, 초단시간 근로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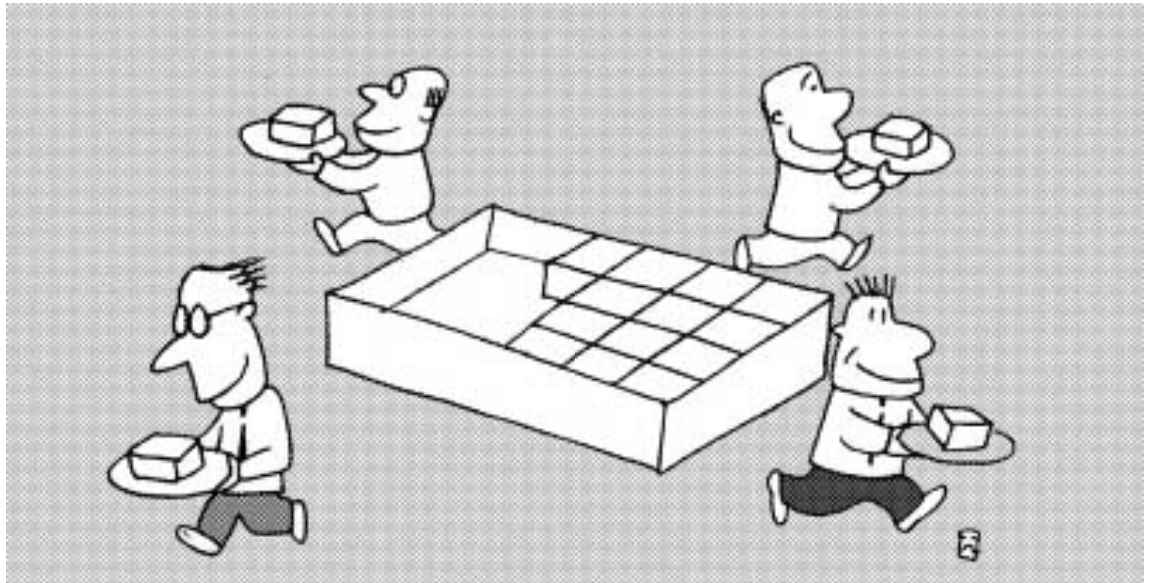
경북지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북지역 돌봄전담사 712명 중 24%만이 무기계약직이며, 74%가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계약직이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들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실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하루 3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꿈수로 ‘십분 계약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실제로 김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일하는 김아무개씨(44세)는 하루 2시간 56분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주 15시간 이하를 만들기 위해 하루 3시간 미만 계약서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성과급 균등분배 패널티 부여는 월권행위

3월 말 행자부(세종시) 앞 규탄 집회 개최 등 강력 대응



행정자치부가 성과급 균등분배시 성과급 0%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얼마 전 발표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성과급을 균등분배할 경우 경영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 0% 부여 등 별도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직원 중 일부가 균등분배하더라도 전체 직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서도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작년 연말(12.23)에도 성과급 지급시 관련규정 준수 철저 지시를 통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규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행자부 지침에 대해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

백한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3월 말 행자부(세종시) 앞 규탄 집회 개최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도 공공운수노조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 수령한 성과급은 개인의 소유물로서 이를 출연하여 재분배하는 행위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처분행위라며,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위반”으로 명시하고 징계, 기관장 경고, 경영평가 관련 배점에서 영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권력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도 작년 성과급 균등분배와 관련해 ‘성과급 부당수령’ 운운하며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중앙공공기관에 내려 보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무력화됐다.

민주노총 총파업 닷 올라

대정부 4대 요구 걸고 4. 24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의 닷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이 노동자-서민 죽이기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오는 4월 24일을 기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3월 31일까지 최종 답변 시한을 제시하며 박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요구했다. 또 3월 중순부터 5월 1일까지 이어지는 총파업 준비-실행 계획도 발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월 31일까지 ▲재벌만 배불리는 친재벌 경제정책 즉각 중단 ▲누구나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즉각 중단 ▲서민중세만 있고 복지 없는 서민 죽이기 정책 즉각 중단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갖고 회담에 응하라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까지 요구에 응

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정부 4대 요구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대정부 요구를 거절하면 민주노총은 4월 24일(금)께 총파업에 돌입해 4월 30일까지 의제별, 부문별, 지역별 투쟁을 연속 배치하고 총파업 투쟁주간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24일 총파업대회, 25일 공무원연금 투쟁, 27일 노동시장구조개혁 투쟁, 28일 민영화 및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투쟁, 29일 비정규직 투쟁, 30일 대학구조조정 투쟁을 잡았다. 노동절인 5월 1일엔 서울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1,2차 총궐기 이어 11월 총파업

25일 대의원대회, 투쟁기금 조합원 1인당 15,000원 조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4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1차 총궐기를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최대한 결합하고, 6월 2차 총궐기에 나선 후 11월에 노동법 개정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5년 정기 대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이 담긴 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투쟁기금 1만원과 공공운수노조 투쟁기금 5천원 조성도 결의했다. 일부 비정규직 사업장, 투쟁사업장

현황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르면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 등 쟁의권을 확보한 조직은 파업을 하고, 확보 못한 조직은 집회 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할 계획이다. 또 노조는 준비 가능한 조직부터 상반기 조기 교섭에 들어가 6월 쟁의 행위 결의 등 2차 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 국립대병원 등은 3월부터 임단협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투쟁본부 전환

25일 정기 대대, 2015년 투쟁계획 등 사업계획 의결

민주노총 4월 총파업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도 총파업 투쟁 본부로 전환했다.

부산지역본부는 25일 20년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4월 선제총파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투쟁계획이 포함된 2015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함께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

해 민주노총의 존재감을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김재하 본부장도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노동 현장을 자본의 권력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다”라며, 4월 총파업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KCTC지부장을 부분부장으로 선출했다. 또 회계감사로 이경태 전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을 비롯해 오세웅, 노기현(이상 3명)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출됐다.

해고 활성화 프로젝트, 2진아웃제

박근혜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는 성과연봉제와 함께 ‘2진아웃제’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2진아웃제를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부터 먼저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안에 저 성과자의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2진아웃제는 2회 연속 업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는 임직원을 면직(免職)해 퇴출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말한다. "공공기관에 우수한 사람들이 입사해도 경쟁이 없으니 5년, 10년 뒤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민간에 뒤처진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철저한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그 방안이 성과연봉제이고, 2진아웃제다.

이처럼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2진 아웃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공공 부문을 본보기로 전체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작년 12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담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는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 처럼 노동자를 강제 전직하고 무리한 업무를 부과해 강제로 퇴직하게 하는 ‘학대 해고’를 합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우회하여, 사측이 자의적으로 퇴출 규모와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 두게 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

켜주는 대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 노동자 해고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얘기다.

그럼 2진아웃제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직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비취볼 때 최하위 등급 비율은 5~10%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확률은 0.25~1%이다.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이나 A등급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S나 A등급을 제외한 사람들이 퇴출 대상에 포함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만약 최하위 등급이 10%로 정해질 경우 매년 100명 당 1명이 퇴출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정원이 3768명인 부산지하철의 경우 매년 37명 이상이 퇴출 대상으로 찍힐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평가란 점과 2진아웃제가 일회성이 아니란 점이다. 누군가는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퇴출 대상은 매년 생긴다는 얘기다. 따라서 2진아웃제가 안착되면 어느 누구도 “나는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역으로 평정권을 가진 공사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지시라도 거부가 불가능해진다.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경쟁구도 속에 구성원간의 협력관계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결국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확정

하계휴양소 장소 물색이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지난 2월 5일 자체 하계휴양소 후보지로 일광해수욕장 용의햇살 평상민박 시설을 답사했다. 이곳은 부산에서 대중교통 기준 1시간 30분(34km) 거리이며, 부대시설로 평상, 샤워실, 탕의실, 화장실, 족구장, 옷보관

함 등을 갖추고 있다. 임대비용은 3천만원(평상 50개 기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하계휴양소용으로펜션 후보지(산청, 밀양, 청도 등) 노사공동 현지답사가 23·24일 진행됐다.

□ 통상임금 소송 담당 판사 교체돼

부산지하철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사 전원이 교체됐다.

대법원이 2월 10일 실시한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김성률(부장

판사), 조승우(배석(좌) 판사), 정하원(배석(우) 판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담당 판사가 바뀐에 따라 소송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는 3월 7일 7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 3월 중순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2015년도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가 3월 중순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2월 중 지부별 노사협의회가 모두 끝나는 대로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계획

으로 준비 중이다. 2월 말 지부별 노사협의회가 종료되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등을 감안할 때 3월 17~19일 쯤 협의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노조 정치위, 3월 4일 정치토론회 개최

진보정치 개편을 주제로 한 정치토론회가 3월 4일 저녁 7시 부산YMCA강당(17층)에서 개최된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정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치토론회는 ‘진보정치 개편, 노동·현장·지역중심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용국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창우(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우상(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유병국(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치위원장), 김화수(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정치위원장), 이의용(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참석한다. 사회는 김태진(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이 맡는다.